

민주 “공천률 이달 말 성안”

“21대 물 준용, 혁신위 안 일부 참고… 원외·청년·여성 의견도 수렴할 것”

더불어민주당 공천 TF가 내년 총선 공천률을 2대 방식을 준용해 3월 말 성안 의원총회와 관리당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월 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총선 공천 제도 TF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14일 첫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 방향에 대해 “전체 네 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 말에 TF안을 확정해 4월 첫 주 당 내 의견 수렴, 최고위 보고, 최종 보고를 하려 한다”며 “4월 둘째 주엔 TF단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당규 제정안을 의결 및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4월 둘째 주에 관리당원 의견 수렴 절차도 가질 것”이라며 “넷째 주엔

관리 당원 50%와 중앙위원 50% 투표를 통해 특별당규를 제정하는 결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천률 기준에 관해선 “2대 물 준용에 22대 물 준용을 확정하고 혁신위 안도 일부 참고하는 것으로 입장을 냈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큰 틀의 논의 과정에서 간사인 제가 검토안을 내고 이를 기초로 논의해 확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이울러 “원외 의견도 수렴하고 청년과 여성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며 “청년, 여성 의견은 민주연구원 등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도 “2대 총선에서 나와 있는 시스템 공천을 갖고

그것을 토대로 하지만 백지화 상태라 생각하고 다시 써 내려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공천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TF 단장을 맡은 이계호 의원은 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의원은 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선 내년 총선에 승리해야 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판단 기준은 경쟁력에 뒤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천 방안 역시 당의 하나 된 단결된 힘”이라며 “모든 후보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결집력을 높이고 총선 승리 주춧돌을 놓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



명에 전북도민중 수역식 14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김명환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에 전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관영 도지사, 김명환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尹 “주69시간 근무제 추진 재검토하라”

“법안 내용·대국민 소통 보완할 점 검토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한 주에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14일 지시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8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표로 법안을 추진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머쓱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주 69시간 근무에 대한 MZ세대의 반발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법안을 발표하며 “MZ세대는 권리와이익이 굉장히 높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

인권 역사현장 발굴·조사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

도, 착수보고회 열고 세부내용·추진계획 등 발표

인권지도자 자문위원 등과 협치 통해 연구용역 진행

전북도는 인권지도자 자문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도청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전북도 인권 역사현장 발굴·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의 범위와 방법, 세부내용 및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인권지도자 제작 용역에는 △도내 산재된 의미있는 인권현장 발굴·조사 △발굴된 인권현장 스토리텔링 △인권지도자 제작·배포 △인권교육 현장탐방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전북도, 인권지도자 자문위원회, 연구용역업체의 협치를 통해 진행되며,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정호윤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착수보고회에서 도출된 세부과제 및 제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완성도 높은 인권지도자 제작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인권지도자 제작을 위한 기획회의(2회), 정책 세미나(3회)를 개최해 타·시 조사 △발굴된 인권현장 스토리텔링 △인권지도자 제작·배포 △인권교육 현장탐방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의 미래’ 1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전북애향본부 한덕수 국무총리 초청강연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윤석석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 도내 기관장, 도내대학교 총장, 애향본부 임직원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 전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도의회 예결특위, 8조8728억원 규모 예산 심사… 16일 열리는 본회의서 최종 확정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영석 전주)는 14일 전북도지사가 제출한 8조872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예산 편성으로,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한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액 사업 2건을 증액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도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

간 개최되는 잰버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기 위해 추가 확보한 국비 45억 원에 대한 도비 매칭 예산 80억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일반예비비는 잰버리 대회 행사 운영에 필요한 2023 새만금 세계잰버리 개최지원 사업에 75억원, 잰버리 아영장 테트 내부 전기 설비를 위한 세계잰버리 아영장 조성 사업에 5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다.

한편, 추가 확보한 국비 45억원 중, 40억원은 잰버리조직위원회로 예산이

직접 편성되며, 세계잰버리 아영장 조성 사업의 국비 5억원만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본예산 8조8,728억원 대비 5억원이 증액한 8조8,783억원이 편성됐다.

진영석 위원장(전주)은 “전북에서 개최하는 세계적인 대회인 만큼 남은 기간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잰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예산안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재훈 기자

도-풀무원, 미래 김양식 연구방향 모색

공동연구 심포지엄 개최

전북도와 (주)풀무원은 14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미래 김 양식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 해양수산국장, 이상윤 풀무원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래양식 선도역할! 바른 먹거리 풀무원과 전라북도가 함께 성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주제발표와 양식정보 공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는 전북도(주)풀무원 외 4명의 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섰다. 전북도(주)풀무원 담당자 김 양식 연구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전라북도 김 양식 현황과 환경, 종자 및 미래 김 양식 방법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동연구 심포지엄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래 김 양식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주)풀무원과 성공적인 공동연구를 목표로 미래 김 양식업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지속가능발전 실현 제도적 근거 마련

나인권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행정위 통과

“도정 운영 최상위 가치로 선언… 새 100년 준비해야”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지난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02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환경지속가능성 지수가 142개국 중 136위, 2005년에는 146개국 중 122위로 최하위 성적표를 받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처음 제정됐다.

이후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도 전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격하되었다가 2022년 1월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는 상위법령으로 새롭게 부활해 7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나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차원의 지

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단위) 및 추진계획(5년)을 수립·이행하고 추진상황을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시

행 과정에서 도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책과제 발굴 교육·홍보·도민 실천 및 교류·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나인권 의원은 “전북도는 지속가능발전을 도정 운영의 최상위 가치로 선언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북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도차원에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 도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초당적 결단만이 저출산 문제 해법”

임정업 예비후보, 출산지원부 신설 등 5대 정책 제시



임정업 전주시에 국회의원의 예비후보가 OECD 국가 중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수준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며 세법 개정 등 5가지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임정업 예비후보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16년 동안 우리나라는 280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생아 수는 20년 전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라며 “초당적이고 혁명적인 결단만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산 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처(가칭 ‘출산지원부’) 신설 △과감한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지방세·상속세·증여세 감면 확대 △출

산 가정에 부모급여 최대 300만원 직접 지원 △에버리부에게 주택자금 과점 지원 △청소녀층(초등~고교) 대 중교통 무상 이용 등 직접적이고도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19~34세 여성 중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은 절반 가량에 그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혁명적인 수준의 정책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임 예비후보는 “눈앞에 다가온 완주군 인구 10만명 시대”의 토대를 놓은 군수출신 후보로서, 전문성을 국정에 접목시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설다”며 특히 “지난 회견에서도 밝혔듯 전주를 ‘지방소멸 해소 교육도시’로 지정받아 저출산 극복의 모범시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별취재